

# 기업은 스마트도시 잔걸음... 국회는 규제완화 뒷걸음

정부, 30조 들여 5G 생태계 조성 '데이터 경제3법' 등 국회 표류중 여야 정쟁에 통과여부도 안갯속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도 도시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다만 규제 완화법이 얼마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서비스활성화와 도시산업 촉진을 위해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해 행정·재정 등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 도시는 사물인터넷(IoT)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삶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국토



지난달 28일 세종시 행정도시 홍보관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추진단' 사무실 개소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부는 세종시와 부산시 등을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를 선정했다. 지역 고유 산업과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 도시 우수사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과 협업해 30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스마트 도시·공장 산업 육성의 일환인 셈이다.

다만 스마트 도시는 복합적 기술이 융합한 만큼 여러 규제도 얽힌 실정이다. 가령 도로·항만·수도·전기·학교 등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선 공공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만, 정보보호법 등이 발목을 잡는다. 경영계가 규제 혁신 없인 요원한 얘기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강도 높은 규제가 개인정보 데이터 산업 활용도를 낮추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완화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오프라인·금융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으로 영입하는 등 여권 내 IT 전문가 영입을 늘리는 추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이 다른 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개정안 4건은 모두 한국당에서 나온 법안이다.

특히 함진규 의원의 경우 민간기업이 스마트 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 도시 특성상 관련 규제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책이다. 규제특례를 적용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 관련 사항을 추가해 시행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준은 신속히 적용되도록 한다.

규제완화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지만, 여야 정쟁이 치열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에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중반부를 향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도 못한 상황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트럼프 "金 결단 있다면, 3자 정상회담 가능"

(김정은)

(남북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트럼프, 남북회담 공감·기대표명"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미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이 있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때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수석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론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이 꺼낸 '4차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또 북미대화 재개 및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가 선순환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회담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그랬

듯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와 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지지 못할 일 없을 것"이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 현주소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대화-북미대화 선순환'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나비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2018년 5·23 한미정상회담→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8년 9·24 한미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2019년 4·11 한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유승준 기자 dn1114@

## 유사군복 제조·유통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위협"

군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유통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사군복의 제조와 판매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1항과 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부산지방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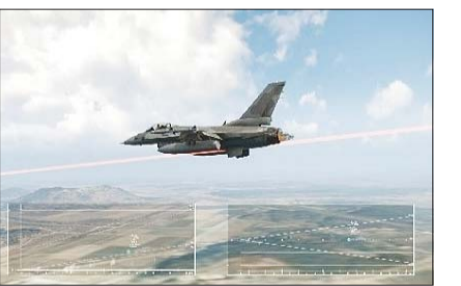
해당조항은 유사군복을 제조,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군복이 외관상 군복과 비슷해 식별이 어렵다"면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군의 신뢰가 떨어져 국가안보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투복은 "전투용으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물품"이라면서 "유사군복의 착용이나 판매 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정부와 LIG넥스원이 공동 투자해 실전배치된 정밀진입레이더(PAR) 개념도. /방위사업청



## 정밀진입레이더 국산화... 향후 수출 기대

방위사업청, 공군에 실전배치

방위사업청은 15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밀진입레이더(PAR·Precision Approach Radar)가 실전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국산 PAR은 기존 미국 레이저는사장비보다 장비 운용성과 정비 지원이 향상돼,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실전배치된 국산 PAR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정부와 LIG넥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국산 PAR이 양산되면, LIG넥스원은 연구 분담금 50억원을 원가로 보전받게된다. 초도 계약 물량은 6대로 향후

공군 전 비행단에 총 10여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공군이 운용하는 활주로는 PAR을 비롯해 항공로감시레이더(ARSR), 공항감시레이더(ASR·Airport Surveillance Radar) 등 다양한 항공관제레이더들이 설치돼 있다.

ASR은 공항 주변 110~130km 상의 항공기의 진입 관제를 담당하고, PAR은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를 활주로 착륙지점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PAR은 악천후 등으로 조종사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최종단계의 안전을 유도해주는 장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김학의 사건' 핵심 참고인 2명 檢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규명해 줄 핵심 참고인 두 사람이 오늘(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자진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성접대 모임이 사실인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사실인지 등을 밝혀 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고 별장 성접대 사건을 주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내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A씨가 2013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영상 속 인물이

'동영상 속 여성' 주장 A씨 의혹 최초수사 담당 경찰관

라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김학의 동영상 의혹'을 최초로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도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수사단은 2013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이세민 전 경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경무관은 당시 자신이 작성한 경찰업무일지 등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장용진 기자